

“차별화된 금융타운 조성 필요”

김광수 의원, ‘기금운영본부 전북이전 1조원 효과를 위한 전략과 과제’ 토론회 개최... 발전 방안 모색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에 따른 경제효과를 높이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다. 국회 김광수 의원(전주갑, 국민의당)은 13일 전북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1조원 효과를 위한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기금운용본부 이전 현황 보고와 발전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방식으로 진행됐다. 윤희승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이날 주제 발표에서 기금운용본부 이전 부대효과와 전북 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기금운용본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서울부산과 차별화된 전북 강점을 살린 금융타운 조성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며 “전북발전의 중심지인 전북혁신도시 활성화와 연계하

는 등 지역금융서비스업 확대, 성장 및 지역전략 산업에 대한 후방효과 창출이 요청된다”고 했다. 이어 “실질적인 경제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적 포트폴리오 구성과 사회적 책임투자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책토론회에서 박태영 국민연금공단 연구원은 “기금운용본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전주에서도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단계적인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면서 “전북이전 후에도 우수한 전문인력 조달과 유지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 연구원은 또 “서울에 근거를 둔 금융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공단 내 화상

회의나 컨퍼런스콜 부스 등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연구원은 “기금운용본부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이외에 위탁운용사 선정회의 등 다수의 금융전문가회의가 개최된다. 이중 일부를 전주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호준 전주대 교수 역시 상주하는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자신운용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정착 자체가 전북 금융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의 핵심요소가 된다. 무엇보다도 자본 시장 기금운용 관련 서비스 전문인력 정주여건 마련과 효과적 업무수행 환경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금융감독원, 여타결

재원 등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들의 전문인력과 조직이전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잠재적인 투자자와 자금공여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대규모 대체투자 경험을 가진 프로젝트 개발자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면서 “기금운용본부차원에서 합리적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들이 도내에서 개발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기금화 공시화 논의 중단”을 언급, 공시화 논란에 중지부를 찍은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신광영 기자

김무성 오늘 1000명 만찬 비박계 총집결·사실상의 대선 출정식

비박계 수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당대표가 14일 1,000여명의 당원들과 만찬을 갖는다. 규모만 봐도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이다. 4·13 총선 이후 정치적 잡탕을 이어온 김 전 대표의 대규모 만찬을 두고 8·9 전당대회를 앞둔 비박계 단합을 위한 행보를 넘어 새누리당 친박을 제외한 모든 세력의 총 결집을 의미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 전 대표의 깃발 아래 비박계가 모두 모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한 웨딩홀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전국의 당원들과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다. 물론 김 전 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당 대표에 당선된 해에 연말 송년회를 한 적이 있다”며 “이렇게 3번을 했고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저를 당 대표로 만들어주신 분들께 일년에 한 두번 만나는 자리지 그 이상은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14일은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서청원 전 최고위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날이다. 때문에 김 전 대표의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을 그대로 믿을 이는 많지 않다. 더구나 불과 20여 일 후면 전당대회다. 김 전 대표의 발언 한마디가 중요한 메시지로 전달되는 것은 자명하다. 때문에 김 전 대표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결의 장소란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이다. 실제 김 전 대표는 전당대회 비박계 후보 단일화에 대해 “당선되기 위해선 당연히 단일화 돼야 한다”며 “단일화가 안되면 당선이 안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김 전 대표는 비박계 누구를 지지할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8·9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 전 대표의 지지가 필요한 전당대회 출마자들의 속내는 다르다.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비박계 정병국·김용태 의원과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김 전 대표가 주최한 만찬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비박 정병국 의원은 12일 김 전 대표를 따로 만나 자신에게 힘을 실어달라 요청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 전 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나 “(김 대표께) 도와달라고 했다”며 “김 전 대표는 ‘열심히 하라’고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여러모로 친박은 신경쓰이는 지리가 아닐 수 없다. /뉴스

사드 배치 비켜간 여야 지역구 의원들, “휴! 살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로 결정되자 그간 후보지로 물망에 올랐던 다른 지역의 여야 의원들은 13일 한결같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지역 주민들이 사드에 대한 전자파 우려와 기지 건설에 따른 부동산 발전 제한 등을 이유로 극렬 반대해왔기에 이들은 자신의 지역만큼은 절대 안된다는 남비(NIMBY·Not In My BackYard) 주장을 해왔다. 특히 당론으로 사드 배치 찬성을 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비켜간 것에 한결 더 후련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들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큰 한숨부터 내쉬었다. 먼저 성주와 함께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경남 양산지역 의원들은 이번 결정에 크게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남 양산읍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운영석 의원은 “(성주 결정에) 안심했다기 보다 사드란 것은 최적지에 설치해야 효과를 보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한 뒤 “양산은 애초부터 고려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다. 아무데나 설치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경남 양산읍의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성주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답하겠”고 즉답을 피했고, 충북 음성 지역구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측은 “그동안 경 의원은 우리 지역에 대한 결정이 난 게 없다고 이야기했었다”고 말을 아꼈지만 한시를 놓았다는 분위기가 읽혀졌다. 이밖에 전남의 벌교 지역의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성주로 결론이 났으니... 우리 벌교는 지나간 것”이라면서 “격정이 많이 됐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사드가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어딘가로는 배치가 돼야 할 것이고, 이 문제가 성주로 났으니 좋은 결말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후보지역으로 꼽히던 수도권의원 의원은 “원래 우리 지역은 대상이 아니었는데 언론에서 추측 보도한 것”이라고만 말했지만 연신 대화에 웃음이 묻어났다. 그만큼 이번 성주 결정이 본인에게 다행이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뉴스

위성곤 ‘세월호 인양 9월로 연기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인양이 9월로 연기됐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에서 “7월 11일로 예정됐던 세월호 ‘선수들기’가 26일 소조기로 연기된 가운데 세월호 인양이 9월 중에나 가능하다는 게 정부 공식문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세월호 선체 인양 및 선체 정지용역 관련 보고’를 근거로 “선수들기를 7월 말에 완료할 경우 인양의 마무리 단계인 육상거치지는 9월 중에나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7월28일 풍톤이탈, 6월13일 너울로 인한 선체훼손, 6월28일과 7월11일 기상악화 등 기술적문제와 기상 등으로 선수들기가 6차례나 연기되면서 인양 일정도 애초 7월에서 8월 다시 9월로 늦춰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



사드배치 결사반대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지역으로 확정 발표된 13일 오후 경북 성주군 도로에 성주 사드배치 반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새만금 예산배정 홀대가 정부 지역균형발전이냐”

정운천 의원 국회 예결특위 종합질의 “새만금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이 될 국책사업” 강조

국회 정운천(전주시,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종합정책질의에서 25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을 질타해 눈길을 모았다. 정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혁신도시, 세종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예산배정을 홀대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새만금 기반도로의 한축인 남부2축 도로의 경우 400억원을 요구했으나 겨우 20억원 반영됐다”고 꼬집으면서 “이마저도 행정처리 지연으로 집행이 보류되고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새만금은 전라북도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국책사업이다”고 강조하면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진출하는 서진(西進)정책의 교두보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1년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총사업비는 22조2,0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지만, 2015년 현재 3조5,000억원만 투자된 상태이다. 그나마 2008년 이후 새만금 예산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올해에는 방수제 축조 및 수질공사가 일부 완료되면서 사업예산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광영 기자

“지특예산 신청 전 의회와 사전 협의”

도의회 행위위, 기획관리실·전북연구원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송성환)는 13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획관리실, 전북연구원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송성환 위원장(전주3)은 기획관리실은 도정 전반의 콘트롤타워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좁게는 부서 간, 넓게는 도와 시·군 조정 기능을 강화해 공동으로 국가예산 확보, 국책사업 발굴 등의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지특예산 신청과 편성권이 지자체 장에게 있어, 의회와의 협업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업신청 전 의회와 협의할 것을 요청하며, 동부권 특별회계가 운용되는 지를 시군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이해서 동부권 특별회계가 보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익산)은 항공대 이전 등

도내에 발생하고 있는 갈등 해결을 위해 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도정을 잘 이끌어가는지 직무능력 등에 대해 도민에게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도정 운영 방향을 수립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철 의원(전주7)은 불합리한 자치입법을 정비하고 새로운 자치법규집 발간이 이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발굴·정비 노력을 해달라. 또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해 전문성을 향상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송지용 의원(완주)은 동부권 발전전략 및 국책사업 발굴현황이 미흡한데, 동부권 6개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실시해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갖고 발전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정책 동향과 추세를 사전에 예측

해 국비 확보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호영 의원(김제1)은 지특예산 이월액과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해 예산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데, 사업발굴과 행정절차를 사전적으로 이행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도에서 확정된 지특예산 내용을 중앙에 올리기 전에 의회와의 사전 교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인정 의원(군산3)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중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서 슬레이트 지붕 개량과 빈집철거를 각 28억, 21호를 개선했다고 했는데 뒷받침이 부족하다.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보다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남주 의원(비례)은 최근 혁신도시 이전기관 단체장들이 제시한 지역인재 35% 채용이 이수화되었는데 도에서 이미 제정된 조례를 활용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러한 부분에 기초단체보다도 대응이 뒤쳐졌는데 도에서 기준을 갖고 시군과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환복위 “사회보장사업 정비 재검토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홍열)는 전북도에 노인복지예산을 환원하고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은 급여의 보충적 원칙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은 동일한 목적 사업에 반영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사, 중복 사회보장 정비결과 전북은 98개 사업(복지부 권고 91개, 지자체 자체정비 7개) 등으로 나타났고 삭감액이 52억5,100만원에 달한다”면서 “삭감된 예산 가운데 노인복지관련 예산이 전체 61.5%인 32억3,000여만원에 달해 정비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북 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6년 5월 18.1%에 달하고 노인빈곤을 또한 48.5%에 이른다”며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와 노인일자리 창출이 매우 절실한 상황에서 예산 삭감은 지방자치와 지역주민 복지권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전북 현실과 다르게 복지부는 향후 복지사업 평가에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협의의 조정을 통한 자율적 시행이라는 정비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헌법이 규정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반헌법적 중복사업 정비결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광영 기자

정호영·이해숙·허남주 도의원 ‘학원·과외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전북도의회 제335회 임시회에서 정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1)과 이해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5), 허남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중 ‘산업서비스’ 전산회계 부문에서 실습실 면적을 60제곱미터에서 45제곱미터로 축소하고, ‘전산회계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0대 이상’ 항목을 삭제했다. 또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멀티미디어·인터넷·컴퓨터·게임·로봇·정보처리·통신기기 부문도 실습실 면적을 60제곱미터에서 45제곱미터로 축소하는 등 주변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 20개 이상 항목을 삭제했다. 정호영 의원은 “개인PC의 보급이 보편화된 상황과, 학원들 또한 특정 프로그램위주의 소수·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할 필요성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학원의 과도한 시설규제 문제가 해결될 것 기대한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